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6년 의회 국정연설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
- 미국 내 소비 특수, 강경 통상정책 및 현지 생산 요건 강화에 대비 필요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무역법 122조 기반 글로벌 관세 운용 강화 5
- (핵심광물) USTR, 핵심광물 협정·공급망 강화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개시 6
- (수출통제) 中, 40개 日 기업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관찰 리스트에 추가 7

🏛️ 의회법안 동향

- 스테이블코인 등 5건 8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

📅 워싱턴 D.C. 주요일정

2.27(금)	•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Core PPI year over year)
3.2(월)	• 2월 미국 S&P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확정) (S&P final U.S. manufacturing PMI)
3.3(화)	• 뉴욕 연준 총재 발언(New York Fed President John Williams remarks)
3.4(수)	• 2월 S&P 최종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S&P final U.S. services PMI)

(정책) 트럼프 대통령 2026년 의회 국정연설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1. 개요

- 트럼프 대통령, 2.24(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실시
 - 총 1시간 48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의 황금시대(Golden Age)” 개막을 선언
-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지지기반 결집 및 국면 전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
 - 연설 4일 전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 정책을 6대 3으로 위법 판결한 가운데, 지지율 하락* 등을 만회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
 - * 평균 지지율 40.5%, 부정 평가 56.7%로 집계, 순지지율은 -16%p로 부정 평가 우세

2. 주요 경제·무역 관련 발언

- (거시·물가·에너지) “생필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이 사실상 감세 효과 발휘”
 - 인플레이션 하락, 가계 부담 완화(가스·식료품·주거비 등 가격 하락 주장) 및 주식시장 최고치 경신을 정부의 성과로 거듭 강조
 - “drill, baby, drill” 기조하에 원유·가스 생산 확대를 주요 성과로 제시
- (감세·가계소득)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을 통한 감세 효과 부각
 - △팁 소득 및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미국산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아동 세금 공제 확대 및 ‘트럼프 계좌’ 신설 등 홍보
- (무역·관세) “관세가 성장 협상의 동력... 대법원판결 이후 대체 법률로 재구축”
 - 관세를 △제조업·투자 부흥 △재정수입 △외교 협상력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
 - “의회 입법 없이도 행정부 직권으로 관세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강조

□ (산업·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자체 조달’ 원칙 강조

- ‘요금 부담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의 자체 발전소 건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요금 인상 방지를 목표

□ (주거·자산시장)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매입 제한을 통해 집값 안정화 추진

- 대형 투자회사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 서명, 의회에 법제화 요청

□ (보건·의료비) “최혜국대우(MFN) 협정으로 미국 약가를 세계 최저로 인하”

- 보험사 대상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인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비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3. 현지 반응

□ 보수·진보 간 정치적 양극화 심화

- 이번 연설은 “역대 최장” 수준의 장시간 연설로 보도되었고, 야당 민주당의 항의·보이콧·맞불 행사 등 강한 분열 장면이 함께 노출

□ 관세 및 경제 관련 주장에 대한 검증과 팩트체크 요구 확대

- 대법원 관세 판결 이후 정부의 ‘관세 권한’과 ‘대체 수단’의 현실성이 쟁점화
- 언론은 휘발유 가격 등 경제지표가 과장·선별적으로 인용되었다고 지적

□ 연설에 대한 진영 간 평가 극명한 대조

- 보수 진영은 이번 연설을 1년 성과를 부각하고 강경한 국정 기조를 재확인 하는 계기로 보며, 지지층 결집 효과에 주목
- 진보 진영은 연설 전반을 사실관계 왜곡·선동적 수사·배제적 메시지로 규정 하며, 정책 정당성과 통합 메시지 부재를 비판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백악관(2.25), CNBC(2.25), PBS(2.24), Brookings(2.25)

(관세) 美, 무역법 122조 기반 글로벌 관세 운용 강화

- (개요)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 문제' 대응으로 '전면 글로벌 관세' 도입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근거로,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예외 품목을 제외한 수입품 전반에 10% 한시 수입 부과금을 150일간 부과한다고 발표(2.24 발효)
 -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 부과금의 '필요시 15% 조정' 및 추가 포고 가능성을 언급하고, EU·영국 등 협정 체결국은 기존 협정 범위 내 누적 부담 억제 방침 시사
- (상세) 150일 한시 적용, 예외·중복 부과 배제 및 '후속 체계' 전환 가능성 제기
 -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한시 수입 부과금을 기존 관세 및 세금에 추가 가산하되, 부속서(Annex) 예외 품목을 두고 232조 적용분은 중복 부과 배제 원칙 적용
 - * 예외 적용: ▲232조 적용분 ▲USMCA 무관세 품목 ▲CAFTA-DR 무관세 섬유·의류 ▲부속서 지정 품목
 -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적용되며, 동 기간 중 232·301조 등 타 권한 기반 조사·조치를 통해 국가·산업·품목 중심의 후속 관세 체계로 대체될 가능성 제기

〈美 대체 관세 운용 수단 비교〉

법률 조항	부과 사유	조사 요건	기간 제한	관세율 제한
무역법 122조	국제수지 문제	불필요	150일. 의회 승인 시 연장 가능	15%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상무부 조사	없음	없음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	USTR 조사	4년. 최대 연장 가능(제한 없음)	없음

[자료] 블룸버그, 로이터 등 현지 언론 종합

- (반응) 법적 정합성 논란 상존, 시장은 예외·조정 기준 및 후속 조치 주시
 - 현지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가 '근본적 국제수지 문제'에 한정됨에도, 행정부가 '무역적자' 논리로 적용하고 있어 법 취지 정합성 논란을 제기
 - 시장은 ▲부속서 기준 예외 품목 확정 ▲232조 중복부과 배제 적용 기준 ▲150일 종료 이후 의회 연장·변경·종료 등 조정 및 후속 조치 여부 등을 핵심 변수로 평가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연방관보(2.25), 블룸버그(2.25), 브루킹스(2.24)

(핵심광물) USTR, 핵심광물 협정·공급망 강화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개시

- (개요) USTR, 핵심광물 다자 협정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개시
 -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핵심광물 가격 안정화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자(plurilateral) 무역 협정 관련 첫 공식 의견 수렴 개시(연방관보 2.26)
 - 그리어 USTR 대표는 동맹국과*의 핵심광물 무역협정 기반 마련과 공급망 강화, 전략적 무역·국경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대중의 의견 수렴 필요성 강조
 - * 그리어는 뜻이 맞는 무역 파트너로 언급(like-minded partners),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시사
- (상세) 협정의 핵심광물 가격 책정 및 국경조치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요청
 - (목적) △핵심광물 공급망·관련 산업 회복력 강화, △시장 기반 생산 확대·공급망 구축* 가속화, △미국 내 채굴·정제·가공 역량 강화, △중국 중심 글로벌 가격 왜곡 완화
 - * 시장 기반 공급망 구축 가속화: 고철(scrap) 회수·재투입, 해외 비시장 정책의 영향 차단
 - USTR은 동맹국과 가격 메커니즘(최소가격·기준가격)과 관세·쿼터 등 국경조치를 포함, 법적 구속력 있는 다중 협정(multiple agreements) 형태로 추진할 예정
 - (요청 의견) ① 핵심광물 선정 및 다자 협정 파트너 국가 우선순위 설정, ② 기준 가격 산정 방식, ③ 가격 메커니즘 및 집행수단(관세·쿼터·가격약정), ④ 규제 차이(regulatory arbitrage) 방지 기준, ⑤ 투자심사, 투자 정책 관련 규범, ⑥ 우회·비공개 시장(Gray Market) 방지 조치, ⑦ 공급망 위기 대응·조정 메커니즘 등 의견 요청
 - 동 공고는 핵심광물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대통령 포고령*(1.14)의 후속 조치로, 의견 제출 마감일은 3월 19일 (Docket ID: USTR-2026-0034)
 - * 232조 조사 결과, 가공된 중요 광물 및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 다수의 행정명령·포고령은 미국의 외국산 핵심광물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명시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연방관보(2.26), USTR(2.26)

(수출통제) 中, 40개 日 기업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관찰 리스트에 추가

- (개요) 중국 상무부, 이중용도 수출통제 리스트·감시 리스트에 일본 기업 추가
 -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에 공급한다고 판단한 20개 일본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하였으며, 추가 20개 기업은 감시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발표(2.24)
 - *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항공엔진 부문 등 주요 방산·중공업 계열사가 포함
 -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감시 리스트 대상 기업에는 개별 수출 허가, 최종사용자 증명 및 군사적 전용 금지 서약 등 강화된 심사 기준 적용
- (상세)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제지가 목표, 희토류·전자제품·조선 등이 포함
 -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중국이 발표한 광범위한 수출 금지 조치에 이어 나온 것으로, 모니터링 리스트를 처음 활용할 것은 향후 추가 수출통제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
 -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목록에는 희토류·화학물질·전자제품·센서·조선·항공우주 장비나 기술 등 800여 개 제품 명시
 -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재무장과 핵 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며, 해외 기관이나 개인도 해당 일본 기업에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전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발표
- (반응) 일본 정부는 유감 표시, 전문가들은 일본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분석
 -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
 -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승리 이후 중국이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일본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분석
 - 일본 기업들은 사실관계 확인 및 영향 분석 중이라고 밝히며, 단기적 공급 차질은 제한적으로 전망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 NBC(2.24), NHK(2.24), 블룸버그(2.23)

미국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스테이블코인 (2.24)	S.3907 (상) (2.24)	Jack Reed (공)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감사 지정 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IUS 법을 개정해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도 미국 내 발행자와 동일한 연례 회계감사 의무 부과
관세환급 (2.24)	S.3905 (상) (2.24)	Ron Wyden (민)	<2026년 관세 환급법(Tariff Refund Act of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CBP가 해당 관세 납부 수입업자에게 이자 포함 환급하도록 하는 법
운송 (2.25)	S.3908 (상) (2.25)	Jim Banks (공)	<상용 운전면허 발급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특정 취업비자 소지자 외에는 상용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
공급망 (2.25)	H.R.7675 (하) (2.25)	Joachim Castro (민)	<동맹 공급망 안보법(Securing Partner Supply Chain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맹국의 대외투자 심사 지원을 통해 적대국 투자로부터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도록 국무장관에게 관련 이니셔티브 설립을 요구하는 법
이민 (2.25)	H.R.7676 (하) (2.25)	Jack Bergman (공)	<H-2B비자 쿼터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수요에 따라 H-2B 비이민 비자 상한을 조정하도록 이민·국적법을 개정하는 법안

* 미국 동부 시간 2월 26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u>Mortgage Rates Fall Below 6% for the First Time Since 2022</u>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2022년 이후로 처음 6% 아래 하락)</p>
	<p>미국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인 6%를 밑돌면서,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p>
The Washington Post	<p><u>Desperate for power, modern AI firms lean on a geriatric American nuclear fleet</u>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건 AI 기업들, 노후 한 미국 원전에 의존)</p>
	<p>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에 이어 노후 원자로들과의 추가 전력 공급 계약 확보 노력, 일부 규제 당국 및 소비자 단체들은 안전성과 비용 문제를 우려</p>
The New York Times	<p><u>FedEx Says It Could Return Any Money From Tariff Refunds to Customers</u> (페덱스, 관세 조치 위헌에 따라 행정부 상대 소송)</p>
	<p>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지 수일 만에, 페덱스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관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다 밝혀</p>
Bloomberg	<p><u>Smartphone Market Set to Shrink 13% Due to Memory Chip Crisis, IDC Says</u> (메모리 반도체 위기 여파로 스마트폰 시장 13% 축소 전망)</p>
	<p>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례 없는 메모리 칩 부족 사태로 인해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2.9% 감소할 것으로 예상, “유례없는 위기” 수준이라 평가</p>
Reuters	<p><u>Wall St slides as tech rally stalls, AI enthusiasm wanes after Nvidia results</u> (엔비디아 실적 여파에 AI 낙관론 주춤, 기술주 약세)</p>
	<p>인공지능(AI) 선도기업 엔비디아의 기대에 못 미친 실적 발표 이후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목요일 미국 주요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p>

* 미국 동부 시간 2월 26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6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026.2월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6 (2026.2.6.)		
코인사-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